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

전문공보담당관 전재영  
전화 041-660-4401, 팩스 041-660-4449

보도자료  
2022. 12. 30.(금)

## 제목 도로법 위헌결정을 악용, 법원을 속이고 수 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국고편취사범 구속기소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(지청장 박주현)은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 4,300만 원을 가로채고, 1억 원을 더 가로채려다 실패에 그친 피고인을 금일(12. 30.) 구속기소하고,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함
  - 화물차량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법률(구 도로법 양벌규정)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후, 그 이전 유죄 선고를 받았던 회사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형사보상(무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상)을 신청하기 시작함
  - 피고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1998년경 폐업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되살린 후 거짓으로 대표청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,
  - 2019. 7.경부터 2022. 9.경까지 3년 동안 전국 법원을 상대로 위 운수회사가 폐업 전 벌금을 납부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한 형사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 4,300만 원을 가로채고, 1억 원을 더 가로채려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실패함
  -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단서 발견, 2년간 끈질기게 범죄혐의를 추적한 끝에 신종 수법의 소송사기 범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기소한 사례임
  - 본건 수사로 1억 원 상당의 추가 범행으로 인한 국고피해를 방지하였고, 추징청구를 통해 이미 유출된 4억 4,300만 원의 국고를 환수할 것임
- 앞으로도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하고, 국고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

# I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① 피고인

순번	피고인	지위·역할	죄명	처분
1	A (남, 64세, 운수업)	범행 총괄, 회사 대표청산인 및 주주 행세	사기, 사기미수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,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	구속 기소
2	B (남, 64세, 중기업)	회사 주주 행세		불구속 기소
3	C (남, 64세, 중기업)	회사 주주 행세		불구속 기소
4	D (남, 72세, 운수업)	재심 및 형사보상청구 실무 담당	사기, 사기미수	불구속 기소

※ 甲주식회사는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0. 2. 28. 설립, 1998년경 폐업 후 2006년경 청산종결말소등기된 폐쇄법인

### ② 공소사실 요지

#### ● 공모관계

- 甲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주주로 행세하여 법인등기를 되살린 다음 위 회사가 과거 벌금을 납부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형사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

#### ● 사문서위조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각 동행사 (A, B, C)

- 2018. 하순경 甲주식회사 명의의 주주명부에 A, B, C 등을 주주로 허위 기재하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, 등기부가 폐쇄된 甲주식회사의 법인등기를 청산법인으로 되살리는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와 법인의 대표청산인으로 A를 선임하는 등기를 경로

## ● 사기 및 사기미수 (A, B, C, D)

- 2019. 6.~2022. 10. 사이 총 614회에 걸쳐, 청산법인 甲주식회사의 정당한 청산인으로 행세하여, 전국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무죄를 선고받아,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심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합계 약 4억 6,200만 원을 편취하고(509건), 약 8,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(105건)

※ 법리상 형사보상결정이 있으면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하여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4억 6,200만 원이 이 사건 편취금액이나, 그 중 1,900만 원 가량은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지 않아 피고인의 실제 수익액은 약 4억 4,300만 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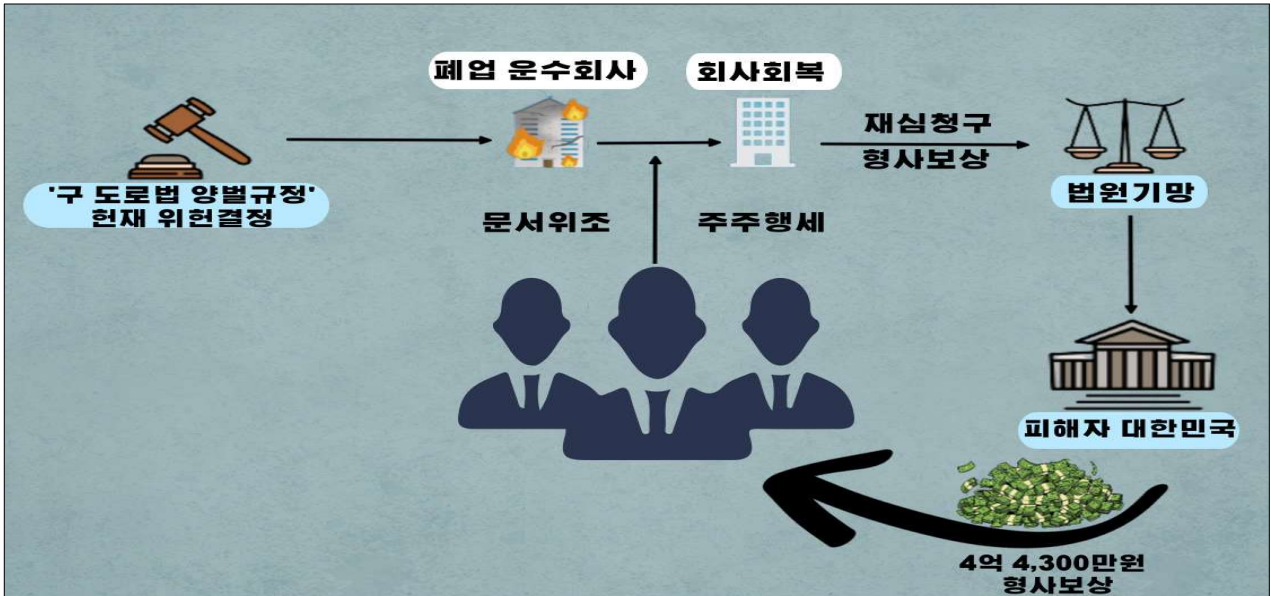
## II 수사 경과

- '20. 11. 재심청구사건 공판과정에서 혐의 발견
- '20. 12.~'22. 9. 형사보상금 지급 내역 등 자료 확보 및 분석 등
- '22. 9. 15. 주거지, 사무실 및 관공서 등 9곳 압수수색
- '22. 10.~12. 피의자, 참고인 조사 등
- '22. 12. 26. A 구속
- '22. 12. 30. A 구속 기소 및 B, C, D 각 불구속 기소

## III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### ① 허위 형사보상금 청구를 통한 국고손실 확인

-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며 위헌 결정이 있었던 도로법위반 사건의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으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,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폐업법인을 허위로 되살린 후 마치 자신이 운영한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 4,3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야기함



## ② 범죄혐의 포착 및 끈질긴 수사

- 도로법위반 사건의 재심재판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 자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국 법원과 검찰에서 간과해온 쟁점을 재심 재판 과정에서 발견
- 이후 해당 법인의 폐업 및 청산과정, 관련 재심소송 등을 끝까지 추적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, 신종 소송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구속 기소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을 재확인
- 수 년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형사보상금 수령을 포기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만 1억 원 상당의 국고 유출을 방지하였고, 이미 입은 4억 4,300만 원 상당의 국고피해는 추정 등을 통해 보존할 예정으로, 공익대변자로서 검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

## ③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하고, 국고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 